

정책동향

개인투자조합 출자총액 하향조정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그 후속조치로 지난 달 23일 '개인투자조합등록및투자확인서발급규정'을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간다.

금번 규정개정의 취지는 주식시장의 장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투자가 매우 저조하고 투자분위기가 위축되어 있던 하지만 제도적인 면에서 개인투자조합의 투자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출자총액 요건을 5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춤으로써 앞으로는 규모가 작은 개인들의 투자조합 결성 시 자금규모의 부담이 적어진다.

또한, 조합결성 후에도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투자조합 특성상 투자액의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년도 투자실적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금운용현황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운영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수요기업 공동 부품개발에 4천억원 투입

산업자원부(장관 신국환)는 2003년부터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수요기업-부품·소재기업 공동 기술개발'을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수요기업이 개발을 희망하는 대형 부품·소재에 대해 매년 10개씩 80여개 과제를 발굴, 2010년까지 총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개발 부품·소재에 대한 수요기업의 구매를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3년 상반기 중 국내 최초로 부품·소재 신뢰성 보증을 실시키로 하고 100억원의 정부예산을 수출보험기금에 반영했다.

산자부는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품·소재산업 경쟁력강화전략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품·소재산업 중장기 발전전략과 신뢰성 향상 대책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총리는 정무위원 및 부품·소재산업 관계자 120여명이 모인 가운데 "부품·소재산업의 발전 없이는 우리산업의 미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발표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술동향

우주개발용 로켓 독자개발

국내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첫 우주개발용 로켓이 지난 달 27일 시험 발사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용 로켓의 기반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 위성발사에 성공한 국가는 러시아·미국·프랑스·일본·중국·인도·이스라엘 등 7개 국가에 불과하다.

로켓의 길이는 14m, 몸통 지름 1m, 무게 6t으로, 등유와 액체산소를 섞은 액체연료를 사용한다. 선진국들이 기술을 팔지 않아 설계에서부터 부품에 이르기까지 100% 우리 손으로 개발했다.

우주개발용 로켓은 한 나라의 기술력을 가늠하는 잣대로 통한다. 지상과 우주의 극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첨단기술이 없이는 개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개발한 우주개발용 로켓의 시험 발사는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혁신사업 지원과제 수요조사 실시

중소기업청은 2003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전략과제로 공고·지원할 대상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접수하고 있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 업자에게 기술개발사업 소요자금의 일부를 직접 출연해 기술혁신 촉진과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지원사업이다.

이번 수요조사는 중소기업의 공통애로기술, 핵심요소기술, 3D 해소기술, 취약기술 등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략기술 개발과제를 도출해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수요조사에서는 중소기업 및 전문가 집단들이 과제명, 개발목표 및 필요성, 개발내용, 기대 효과 등을 인터넷 상으로 제출하고, 관련 전문가들은 개발과제를 선정 후 2003년도 상반기에 지원대상과제로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동향

벤처투자 펀드주도 전환

내년에는 벤처투자조합 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모태 펀드(Fund of Funds)가 결성되고 현재 회사 중심의 벤처투자를 펀드 중심으로 가져간다는 방침 아래 유한회사 형태의 벤처캐피털을 시범 운영하는 사업이 실시된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이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되고 내년으로 끝나게 되는 창업 기업 법인세 면제시한의 연장이 추진된다.

이 방안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마련한 것으로 정책자금 등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벤처캐피털 유동성 확충과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능력배양, 국내외 시장개척 지원 등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이 방안에 따르면 벤처캐피털의 투자금 조기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코스닥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프리(pre)코스닥 유동화펀드'가 연내 500억원 규모로 조성되고,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모태펀드가 내년 6월까지 500억원 규모로 설립된다.

벤처육성은 벤처캐피털을 통해

정부 주도의 유망 벤처기업 지정제도에서 벗어나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선별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벤처캐피털을 통해 간접적으로 벤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윤창번) 주최로 열린 '벤처 재도약을 위한 시장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에서 KISDI의 김성현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벤처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단기간에 벤처 붐을 일으키다 비리와 시장침체에 휩싸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벤처업계의 위기를 타파하고 재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가 각각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망한 중소벤처를 선별하고 지원하는 것은 시장의 몫이며 이러한 시장기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정부가 직접 나섰던 벤처확인 제도의 경우 벤처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그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고 있다"면서 "벤처를 중소기업과 같이 취급해 지원시책을 시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뉴스

[미국] 프린티어 벤처 '뜨다'

최근 미국에서 극심한 불황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기술개발에 도전하는 벤처기업들이 속속 설립돼 IT업계의 미래를 밝혀주고 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이들 벤처기업은 우선 지리적으로 미 서부 실리콘밸리부터 남동부 앨라바마에 있는 헌즈빌 등 전국에 고르게 분포해 있다. 이들이 개발하는 기술의 내용도 컴퓨터 내부 전원관리를 기존의 코일 대신 실리콘 칩을 사용해 제품 크기를 줄이는 것에서부터 휴대폰 등으로 WiFi 수준의 초고속인터넷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초광대역(UWB) 관련 단말기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고 소개했다.

USA투데이는 '볼테라', '보니즈', '타임도메인', '제타코어', '이매고' 등을 최근 나노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유망 벤처기업으로 소개했다.

[일본] 일본 정부, 오픈소스에 관심

윈도우의 대항마로 급부상하고 있는 리눅스의 세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정부차원에서 오픈소스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적극적으로 오픈소스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남미 정부에 비해 그동안 소극적 움직임을 보여왔던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키로 하고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와 관련 일본 총무성의 가와치 다쓰야 부국장은 "이번 프로젝트에 5000만엔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바이오메트릭스 여권개발 착수

일본 외무성이 여권의 위조 및 변조방지를 위해 지문·얼굴·눈의 홍채 등 신체적 특징을 활용해 본인이 확인 가능한 새 여권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 여권은 테러범과 국제범죄 조직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사용해 출입국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지문채취 등과 관련한 인권침해문제, 개인정보 보호문제 등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안고 있다.

또 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바이오메트릭스 기술을 응용할 출입국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도 새 여권 도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로 지적됐다.